

# 스포츠 기본·체육인 복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 등 관광서 공휴일 규정 개정령안도 통과... 광복절부터 대체휴일

누구나 차별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한 스포츠 기본법 공포안과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스포츠기본법,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쿄 올림픽에서 선전 중인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날 의결되는 스포츠 기본법 공포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 국가 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

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은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함께 명시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 시행령에 따라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

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 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부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 밖에 일반 안전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수입 예산을 확대해 통한 예산물 수입 안정을 위해 784억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뉴시스

### 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대표발의



임산부 건강권과 신생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별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대안사업에 포함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면서 "향후 조리의원의 전격적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청소년 수당 지급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3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주관해 향후 전북도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 도내 청소년 수당 지원 머리 맞대다

### 최영규 도의원, 조례 제정 세미나 열어... 국내외 사례 소개 "청소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 적극 지원 나서야"

청소년 수당 지급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3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주관해 향후 전북도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호원대 서영미 교수는 청소년 수당에 관한 국내외 주요 사례와 함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청소년 수당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특히, 사회적 변화상을 반

영해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시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청소년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의 김정학 교수와 이연희 전주비전고소장(학부도 대표), 그리고 전주신승고와 군산여고 학생이 학생대표 자격으로 토론에 나서 청소년 수당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공유했다.

최영규 의원은 "2021년 기준 전북도 예산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다"면서 "이

번 세미나를 계기로 청소년을 염연한 주제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뤄지는 한편, 청소년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입법 참고자료 확보 차원에서 청소년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해당 용역에는 전문가 자문과 청소년 대상 심층토론 결과도 수록됐으며, 청소년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현금 지급보다는 바우처카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환경피해 갈등관리 체계 구축

### 황영석 도의원 대표 발의 예방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현행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은 환경피해 발생하고 난 후 행정이 해결에 나서거나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1)은 대표 발의한 '전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피해의 범위를 사업 활동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후 조정·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환경피해가 커지고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 환경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행정이 관여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고 있는 주민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갈등 및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도내 시군별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관여하기 쉽지 않다"며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다"며 "더욱이 실제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입증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해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도가 시·군별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우려되는 피해로 인한 주민갈등까지 사전에 파악,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25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상정된지 120일이 지난 법안이 27개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타 위원회 법률안 미상정건 전체회의의 교류 등 27개 법안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 논의사항을 고려해 주력 중점 법안을 선정해 8~9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가 열리면 (법사위 체계지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라며 "25일 국회 본회의, 28일 국회 워크숍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 의회에 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권한을 고유 업무인 체계·지구심사로 제한하고, 그 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절반 단축키로 한 것이다. /뉴시스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큰 기여

### 민주 이원택 의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전북 유치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전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큰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은 전북을 포함 6개의 광역자치체가 공모에 참여해 초기부터 광역자치체간 치열한 경쟁이 전

개됐다.

이에, 이 의원은 전북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수홍, 한병도 의원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미생물, 종자, 식품, 소스, ICT, R&D 등은 연계한 전북의 농생명 전략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전북이 농생명 수도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신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스 조성사업의 전폭 유치를 위해 헌신해왔다.

이원택 의원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전북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수홍, 한병도 의원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미생물, 종자, 식품, 소스, ICT, R&D 등은 연계한 전북의 농생명 전략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전북이 농생명 수도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신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